

## 과학정치연구의 정치학적 적실성: 국내 연구현황 검토와 논의의 제기\*

이서영 | 한국의국어대학교\*\*

김웅진 | 한국의국어대학교\*\*\*

### | 국문요약 |

1959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논문과 국내에서 출간된 저서를 검색한 결과, 과학적 지식의 생산경로에 개입하는 과학적·과학 외적 패권의 배분과 전개과정에 관한 과학정치(politics of science) 연구는 우리 정치학계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부진성은 기존 연구전통, 즉 “강한 과학(strong science)”의 유리스틱(heuristic)에 함몰된 개별 과학자의 창의성 및 독자성 상실과 정치사회적·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지향한 합리적 선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자 집단을 포함한 정치세력의 점진적 분화와 다변화를 노정하여 온 현대 한국정치사회의 변화양상과 과학행위의 정치적 자율성 확보를 통한 균형적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과학정치연구의 정치학적 적실성은 명백히 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①과학행위와 과학적 지식의 정치사회적 본질, ②지식생산과정에 개입하는 정치세력의 형성과 변화양상, ③과학정치의 행위자 및 ④그들 간의 상호작용구조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 I. 서론

엄정한 절차적 협약에 따라 생산된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며, 생산주체로서의 과학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다는 것이 통상적 관념이다. 그러나 과학자는 여타 사회영역의 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본성(social nature)”을 지니고 있고(Barber 1961), 이들로 구성된 과학자 사회는 생산된 지식의 “사회적 실체(social entity)”를 고유한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에 상응하여 구축한다(Brown 1988). 즉, 특정한 연구전통(research tradition)<sup>1)</sup> 내에서 전개되는 지식생산행위는 핵심세력(core set)<sup>2)</sup>이 제안하거나 인증한 분석기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패권 내지는 과학적 교조에 대한 사회적 순응성(social conformity)을 노정하게 마련이다.

더 나아가 한 사회체계 내에서 과학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상호의존적·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구성과 운영이 상당 부분 과학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고, 또 과학적 지식의 생산이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동되는 것처럼(Jasanoff 2006) 과학행위와 정치적 행위는 상호정당화의 역동을 표출한다(프리켈 2013). 요컨대 과학적 지식은 그 생산과정과 사회적 적용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을 필연적으로 노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적 지식생산행위의 정향과 경로를 통제하는 과학적·과학 외적 패권의 배분과 전개과정(김응진 2009, 13)”, 곧 과학정치(politics of science)의 전개과정은 정치학 연구의 한

---

\* 본 논문의 초고는 교신저자에 의해 2014년 8월 23일 속초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공동저자가 참여하여 수정, 보완되었음.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부 강사.

\*\*\* 공동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 연구 영역에 있어서의 실체와 과정, 그리고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 이론을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적절한 방법에 관한 일반적 가정을 수용하고 있는 과학 체계 혹은 과학자 공동체. Laudan(1978), 87.
- 2) 과학사회(과학체계) 내에서 강력한 유리스틱을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그러한 유리스틱에 기초한 과학행위의 네트워크를 구축, 관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지식생산을 패권적으로 통제하는 소규모 지배집단. Collins(1992), 142-45.

독립적 영역으로서 충분한 학문적·실천적 적실성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학정치의 전개양상에 관한 국내 연구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그 정치적 적실성과 연구의 맥락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제Ⅱ장에서 과학정치에 관한 국내 연구의 축적현황을 논문과 단행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제Ⅲ장에서 우리 정치학계에서 과학정치연구가 부진한 이유를 ‘과학정치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과학정치연구의 정치적 적실성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과학정치연구의 논의의 맥락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II. 과학정치에 관한 국내 연구의 축적현황

지금까지 축적된 국내 과학정치연구의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 우리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양대 학회인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정치학회보』(이하 KPSR)와 『국제정치논총』(이하 KJIR), 그리고 연구단행본(저서)을 통해 발표된 과학정치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방법으로는 KISS(한국학술정보)와 DBpia(디피이아) 등 2개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아카이브 및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키워드 추적방법을 사용하였다. 키워드 추적을 위한 검색어는 논문과 저서 공히 ‘과학’, ‘과학자’, ‘지식’, ‘과학적 지식’, ‘과학사회’, ‘과학자사회’, ‘과학기술’, ‘과학정치’ 및 ‘과학패권’ 등 9개 용어이다.

우선 논문의 경우, KPSR과 KJIR을 검색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로서 정치학 분야 학술지들 가운데 출간 기간이 가장 길 뿐 아니라(1959년~2014년 현재), 인용지수의 값 역시 가장 높기 때문이다(KPSR의 “영향력 지수”는 1.0183, KJIR은 1.0843).<sup>3)</sup> 검색

3) 지난 2년간 측정된 2014년 기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영향력지수. 한국연구재단 한국학

의 범주는 KPSR에 1959년부터 2014년 3월(창간호~제41집 3호)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들, 그리고 KJIR에 1963년부터 2014년 6월(창간호~제54집 2호) 사이에 수록된 모든 논문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검색된 논문의 제목, 목차, 초록을 확인하여 과학정치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논의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학술지별 과학정치연구 관련 논문 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학술지별 과학정치연구 논문 수(1959-2014)

학술지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합계
논문 수	12편	6편	18편

검색 결과 양 학술지에 게재된 과학정치 관련 논문은 KPSR 12편, KJIR 6편 등 총 18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KPSR과 KJIR의 각 호에 10편에서 20편의 논문이 수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8편은 1호를 채울 수 있는 분량에 불과하며, 따라서 지난 55년간 축적된 연구결과는 지극히 미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연구의 범주와 상정된 연구문제들을 추적하기 위해 선정된 논문의 내용을 ①과학적 지식의 탈과학적·정치적 성격과 지식생산경로에 관여하는 과학패권의 작동양상에 관한 방법론적·(사회)과학철학적 논의, ②과학기술의 발전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추진에 있어서 노정되는 정부 및 정치세력의 개입양상에 관한 논의(과학기술 발전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성격), ③국가 간 또는 사회집단 간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 양상과 이전의 매체와 기제로서 구축되는 지식 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3개 영역에 따라 분류되는 논문의 서지정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영역별 과학정치 관련 연구논문 (게재연도순)

연구영역	논문제목 (총 18편)
과학패권의 작동양상에 관한 방법론적·과학철학적 논의 (5편)	김웅진. 1990. “지식생산경로의 폐쇄성.” 『한국정치학회보』 24(3). 311-324.
	김웅진. 1993. “방법론의 이론 종속성과 이론의 방법론 종속성.” 『한국정치학회보』 27(2). 165-179.
	김웅진. 1995. “문제풀이, 범범과학과 과학의 진보.” 『국제정치논총』 34(2). 535-548.
	김웅진. 1995. “과학적 발견의 정치사회적 정당화.” 『한국정치학회보』 29(3). 295-310.
	김웅진. 1999. “지식의 축적과 연구 전통의 진보.” 『한국정치학회보』 33(3). 9-22.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 (6편)	김의곤 외. 1994. “과학기술 민주주의와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 『국제정치논총』 34(1). 21-45.
	김상태. 1995.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이론적 분석 틀.” 『한국정치학회보』 29(1). 53-72.
	조현석. 1998. “국제 과학기술협력과 다자주의.” 『국제정치논총』 38(1). 41-63.
	배영자. 2004. “과학기술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38(3). 235-254.
	배영자. 2005. “생명공학기술과 국제규제.” 『한국정치학회보』 39(3). 353-373.
	함성득, 양다승. 2012. “한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6(1). 141-173.
지식 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 (7편)	홍성민. 1999. “국제정치문화연구 방법론 서설.” 『국제정치논총』 38(3). 25-42.
	김상배. 2004.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한국정치학회보』 38(3). 255-276.
	김상배. 2005. “기술과 지식, 그리고 기식(技識).” 『국제정치논총』 45(1). 57-82.
	민병원. 2005. “인공지능체와 제국의 지식네트워크.” 『한국정치학회보』 39(2). 255-275.
	김상배.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론.” 『국제정치논총』 46(3). 7-29.
	김상배. 2007. “글로벌 지식패권의 국내적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41(2). 245-269.
	미우라 히로키. 2010. “지식교류와 현대한일관계.” 『국제정치논총』 50(1). 285-316.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8편의 논문이 세 가지 영역에 비교적 고루 분포되었다. 즉, 과학패권의 작동양상에 관한 방법론적·과학철학적 논의가 5편,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6편, 지식 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7편으로서, 집중적으로 연구된 영역이 부각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영역에서 상정된 연구문제 역시 산만성을 노정하고 있다. 예컨대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의 경우,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네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기술민족주의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이론적 분석구도를 제시한 논문(김상태 1995)으로부터 국제적 규제가 생명공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미친 영향을 “카르테헤나 생명안정의정서” 형성 및 실행과정을 사례로 분석한 논문(배영자 2005)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문제가 상정됨으로써 특정 사안에 관한 연구결과의 체계적 축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과학패권의 작동양상에 관한 방법론적·과학철학적 논의는 본 연구의 검색범주 내에서 추적된 논문 5편이 모두 동일한 저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비록 연구정향과 시각의 일관성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학계 내에서 관련된 연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서의 형태로 출간된 과학정치 관련 연구들을 사회과학분야 단행본을 대상으로 1차 검색한 후, 번역서 및 과학정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순수 과학철학, 지식사회학, 과학기술학 서적을 제외하고 남은 저서의 책 소개, 목차, 저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총 16종의 저서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저서의 서지정보와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영역에 따른 분류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영역별 과학정치 관련 저서 (출판연도순)

연구영역	저서명 (총 16종)
과학패권의 작동양상에 관한 방법론적·과학철 학적 논의(4종)	김웅진. 1996. 『방법론과 정치적 실존』. 고양: 인간사랑. 김웅진. 2001. 『신화와 성화: 과학방법론의 패권정치』. 서울: 전예원. 김웅진. 2005. 『과학헤게모니의 정치적 영상』. 서울: 청목출판사. 김웅진. 2009. 『과학 패권과 과학민주주의』.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8종)	한국과학재단. 1997. 『과학기술이 국가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과학재단. 김형국 외. 1998. 『과학기술의 정치경제학』. 서울: 오름. 한국과학재단. 2000. 『국제화시대 과학기술의 국제역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한국과학재단.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2002. 『과학기술 환경 시민참여』. 파주: 한울. 허영식. 2004. 『과학 기술과 현대사회』. 서울: 원미사. 황태연. 2008.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치경제학』. 서울: 중원문화. 심광현. 2009.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 서울: 문화과학사. 이영희. 2011.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서울: 문화과지성사.
지식 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4종)	황현수. 1990. 『지식인과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홍성태. 2005. 『지식사회 비판』. 서울: 문화과학사. 김상배 외. 2008.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파주: 한울. 홍성민 외. 2008. 『지식과 국제정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위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6종의 과학정치 관련 저서가 검색되었고, 각 영역에 따라 과학패권의 작동양상에 관한 방법론적·과학철학적 논의 4종,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 8종, 지식 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 4종 등으로 분류되었다. 각 영역 내에서 가장 최근에 저술된 저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김웅진(2009)은 과학적 지식이 “방법론적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권력관계”의 결과물이고, 정부와 과학자 집단이 과학적·과학 외적 실익을 교환하는 “후원-수혜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한다. 이영희(2011)는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적·사회적 민주화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의 참여민주주의 원리 도입을 주장한다. 또한 홍성민(2008)은 국제정치경제의 역동적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이 지식을 통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전파되며, 미국식 언어와 상징의 무분별한 수입이 한국 정치적

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좁게는 정치학, 넓게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지식생산과정의 정치적 역동에 관한 단행본이 단 16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한국과학재단과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를 제외한 개인 저자가 10명 안팎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학패권의 작동양상에 관한 방법론적·과학철학적 논의를 담은 저서 4종이 모두 같은 저자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 Ⅲ. 과학정치연구의 부진성: 과학정치학적 접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정치학연구에 있어서 과학정치에 관한 분석적 담론이 지극히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과학적 지식생산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인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학자와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본성”으로 인해 과학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필연적으로 노정된다면, 우리 정치학계는 왜 지식생산과정에 개입하는 과학적·과학 외적 패권의 전개과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가?

우리 정치학연구의 목록에 과학정치가 주요한 담론 주제로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기존 연구전통, 곧 “강한 과학(strong science)”<sup>4)</sup>의 유리스틱(heuristic)<sup>5)</sup>에 함몰되어 연구문제의 상정과 문제풀이기제의 선택에 있어서 창의성과 독자성

4) “견고한 유리스틱과 다수의 추종자들을 확보함으로써 비단 과학사회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권위와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과학 체계”로서 “거대과학(Big Scienc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Fuller(2000), 45; 김웅진(2009), 15에서 재인용.

5) 유리스틱이란, “강력한 문제풀이 기제(a powerful problem-solving machinery)”로서 “특정한 과학 체계(연구 프로그램[research programme]) 내에서 과학적 적실성과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이론적·방법론적 협약과 절차를 뜻한다.” Lakatos(1986), 4-5; 김웅진(2009), 15에서 재인용.



을 상당부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과학사회 내외에서 강한 과학, 혹은 ‘정통과학(orthodox science)’이나 ‘주류과학(dominant science)’의 위상을 획득한 연구 전통에 속한 개별 과학자의 자율성은 크게 제어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자율성은 주어진 연구목록과 그에 상응하는 문제풀이기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 정치학자들이 기존 연구전통의 유리스틱과 연구문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과학정치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하기란 매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강한 과학이 추동하는 인지습성(habits of mind), 곧 자신이 속한 연구전통의 유리스틱이 지닌 과학적 적실성에 대한 강하고도 무조건적인 신뢰와 더불어, 연구전통에 속한 모든 동료 과학자들이 그러한 유리스틱을 충실히 준수하리라는 집단적 확신(Margolis 1993, 7-8)이 우리 정치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문제, 연구전통을 벗어나는 일탈적이지 창의적인 시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애당초 왜 과학정치가 우리 정치학연구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지식의 유입과정이 한 시대의 정치나 경제체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홍성민 1999, 38)”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 정치학의 연구정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정치학의 연구목록에는 과학정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6)</sup> 즉, 근대 이후 합리성과 인간이성에 대한 신념이 깊이 뿌리내린 미국, 특히 사회과학(정치학)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도 중립적인 과학행위’가 노정하는 정치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결코 환영받기 어렵다. 현재 미국 정치학연구의 주류 유리스틱인 경험과학적 분석구도는 관측과 측정, 인식과 자료해석의 가치중립성을 기본 전제로서 수용하고 있다. 즉, 지식생산의 강력한 도구적(방법론적) 객관성으로 인해 지식생산행위에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최근 미국 정치학자들 사이에 흔히 회자되는 “데이터 채굴(data mining)”은 미국 정치학계의 경험과학적 정향을 극명하게 대변한다(King, et. al. 1994, 174). 이러한 좌우명을 과학적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외관(façade)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정

6) 예컨대 교신저자가 참여한 2014년도 미국 중서부정치학회(MPSA)의 제 72회 연례학술회의(2014년 4월 3-6일, Chicago)에서 발표된 약 4,500편의 논문 가운데 미국 학자들이 발표한 과학정치 관련 논문은 단 한편도 포함되지 않았다.

치학계 내에서 지식생산의 객관성과 증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과학정치의 역동에 관한 연구는 ‘기피분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과학을 포함한 사회의 전반적 영역에 걸쳐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대미의존성으로 인해 이러한 미국 정치학의 연구정향이 우리 정치학연구에 급속히 유입, 정착되어 왔다는 사실<sup>7)</sup>은 과학정치가 우리 정치학 연구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를 자연스럽게 해명해 준다.

한편 과학자들이 비단 연구문제 뿐만 아니라 지식생산의 이론적·방법론적 기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리게 되는 합리적 선택이 과학정치를 우리 정치학연구의 목록에서 배제하도록 유도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타 사회영역의 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과학자는 그가 속한 과학사회 내에서 지식생산 및 발표기회와 연구자원의 획득, 정규(full-time) 과학자로서의 안정된 신분, 경제적 보상, ‘유능한 과학자(competent scientist)’의 위상에 수반된 가시적, 비가시적인 특혜 등 과학적·과학 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료 과학자나 여타 행위자들과 경쟁한다. 또한 이해관계를 공유한 과학자들이 공식적·비공식적 지식생산조직을 구성해 과학사회 내외의 정책결정과정, 특히 연구자원과 기회의 배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치학자를 포함한 모든 과학자들은 비단 자신이 속한 과학사회(연구전통)의 핵심세력 뿐만 아니라 연구전통을 후원하는 정치사회세력과 실익의 교환망(exchange network)을 전략적으로 구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학자들은 그러한 교환망을 통해 정부를 포함한 후원집단과 과학사회의 패권세력이 요구하는 과학적 지식을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선택의 역동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김웅진(2009, 72, 74)에 따르면,

---

7) 이에 관하여 김영명은 우리 정치학이 “아직도 거의 철저히 미국 정치학에 종속되고 ‘한국정치학회보’는 한국어로 된 미국 정치학회 한국지회보를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정치학의 문제 영역들이 미국인의 시각에 따라 미국인의 현실과 관심을 반영하고, 학문의 수준과 특정 연구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미국식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며, 심지어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한국 정치학자들이 미국에서 나온 개념과 분석틀을 별다른 변형 없이 수입·적용한다는 것이다. 김영명(2006), 14, 21; 김영명(2010), 22.

...따라서 “강한 과학(strong science)”의 핵심 세력은 후원집단에게 충분한 실익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마련이고, 그러한 압력은 추종자들에게 전이되어 개별 과학자들의 지식생산, 특히 정치사회적·경제적 실익을 보장해주는 지식의 생산을 추동한다. 즉, 지식생산행위의 탈과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다...개별 과학자 혹은 과학자 집단은 “강한 과학”이 견지하고 있는 유리ست릭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에 수반된 실익을 획득하려는 합리적 선택을 내린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미국 정치학계의 경우, 이미 “강한 과학”으로 자리 잡은 경험과학의 유리ست릭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문제를 선택해야 소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각종 연구자원 확보가 수월해진다. 또 한국에서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프로젝트가 양산되었는데, 연구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화두에 맞추어 연구제안서를 작성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에 따른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고, 한국연구재단은 2014년 3월 7일 정책연구용역과제 <창조경제 선도를 위한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를 공모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3년 6월 30일 연구보고서 <창조경제 기반의 농업·농촌 신성장 전략>을 발간한 바 있다.<sup>8)</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학정치를 연구하려는 정치학자는 연구자원과 기회의 확보와 맞물려 두 가지 측면에서 과학적·정치적인 제어를 받게 된다. 즉, 과학정치연구를 통한 과학패권의 규명은 강력하게 구축된 기존 과학계 내의 사회적, 과학적 질서를 명백히 훼손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전통의 유지와 강화를 통해 실익을 확보하여 온 ‘성공적 과학자들’ 혹은 과학적 패권세력은 과학정치연구의 위협을 감지함으로써(Cohen 1985) 그 과학적 적실성을 부인하거나 더 나아가 과

8) 한국연구재단(<http://www.nrf.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http://www.krei.re.kr>)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2014.9.9).

학정치연구자를 과학계로부터 배척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과학정치연구는 “과학장(科學場, *le champ scientifique*, scientific field)”에서 연구전통의 핵심세력이 보유한 “과학적 자본(*scientific capital*)”<sup>9)</sup>의 기반을 흔들 수 있고(부르디외 2002),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정치연구자는 “따돌림, 흠집내기(*bruising*), 심리적 가학(*psychological bullying*)(김웅진 2009, 58)”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학정치연구의 기피현상은 과학적·과학 외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합리적 선택인 동시에 ‘기피영역’을 다룸으로써 받게 될 제재를 회피하려는 심리적 역동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 IV. 과학정치연구의 정치학적 적실성

우리 정치학계에서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과학정치를 현 시점에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과학적 지식생산’에 관한 정치학적 담론을 진행해야 하는가? 지식생산과정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연구가 현대 한국의 정치사회적 역동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서는 과학정치연구의 정치학적 적실성을 한국의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과학자의 정치세력화, 그리고 과학행위의 자율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현대 한국사회의 정치적 장(場)이 노정하는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행위주체의 다양화와 급격한 정치세력화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사회세력의 점진적 분절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의 다원화가 야기한 정치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산은 비단 공공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요컨대 현대 한국의 정치사회적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부

9) 과학장이란, 과학자들이 세력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장(場)으로서, “‘객관화 작업’의 기초와 원칙에 대한 정치적이고 지적인 암묵적 계약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과학장에는 “세속적(정치적) 권력”과 “개인적 위신”이라는 두 종류의 과학적 자본이 공존한다. 부르디외(2002).

상한 행위자, 곧 ‘비정치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던 행위자들과 그들의 집단역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지식과 권력(Knowledge and Power, 1981)』의 저자 라우즈(Joseph Rouse)에 따르면,

“...비정치적(nonpolitical)”으로 보이는 행위자와 조직의 일상적 활동 (practice)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정치사회 이론가들에 의해 명확히 밝혀진 바 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정치적인 것(political)”의 영역을 국가의 영역과 동일시한다면 현대사회의 조직 및 운영이 노정하는 지극히 중요한 특징을 놓치게 된다...(Rouse 1987, 211).

과거 ‘정치적 중립성’ 혹은 ‘탈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던 한국의 과학자들이 현대 한국의 정치적 장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오늘날 전문성을 갖춘 수많은 과학자들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독특한 정치과정을 형성하고, 과학자 사회 내외에서 지식생산조직을 구축하여 다원민주주의(pluralist democracy)가 당면하게 마련인 일반적인 문제<sup>10)</sup>를 야기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성명서를 다섯 차례 발표하고 인수위원회 및 국회를 방문했으며, 과학자 118명의 연명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인수위가 애당초 발표했던 ‘교육과학부’ 대신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을 바꾸어 분리되었던 과학과 기술을 하나의 부처에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과실연 200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62). 또한 2012년 총선을 전후하여 과학계 내에서 과학자가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2, 47).

10) 다원민주주의는 ①조직(organization) 자체가 자원이기 때문에 조직구성원과 외부인 사이에 정치적 불평등이 생기고, ②조직구성원이 단결하고 특정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적인 이익을 저해하며, ③공공의제를 왜곡시키고, ④사적 조직이 부당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Dahl(1982), 40-47.

한편 현대사회의 정치적 역동은 결코 과학기술의 변화·발전과 유리될 수 없다. 즉, 과학적 지식과 과학기술은 권력행사의 “정치적 매개체(political agent)”로 작동한다(Jasanoff 2006, 14).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동의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진부한 정치학적 명제이며, 근대 이후 과학자들이 합리적이자 전문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특정한 공공의제에 관한 여론을 동원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권위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왔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무어 2013, 347).<sup>11)</sup> 요컨대 정부는 공공의제를 설정하고 그에 관련된 정책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자의 권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과학기술 전문가의 견해’,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의 실험결과, 과학자들에 의해 생산되어 공인된 각종 통계치들은 총체적인 국가전략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반대세력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자원으로 사용되기 마련이다.

예로서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 개발”을 통해 “창조경제와 국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를 지닌 대통령 자문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2014년 9월 현재 부의장 박상대 서울대 명예교수(생명과학)를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반분과에 권동일 서울대학교 교수(재료공학), 오세정 서울대 교수(물리학) 외 5명, 미래전략분과에 나도선 울산대 교수(의과학) 외 7명, 그리고 창조경제분과에 강성모 KAIST 총장(전기전산학) 외 7명 등 과학기술의 핵심영역을 대표하는 총 2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2)</sup> 또한 현 농림수산업부의 이동필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농업경제학자이며, 윤성규 환경부장관 역시 한양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 연구교수로 근무한 과학자(환경공학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과학자 집단은 공공정책의 정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요구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점진

11) 과학적 권위의 원천은 “①과학이 궁극적으로 공익을 지향하고, ②과학적 유능함을 갖추려면 장기간에 걸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며, ③과학은 공통의 방법론적·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통일된 사회적 활동이며, ④과학적 지식은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에 의해 면밀하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객관적이며, 정치적·도덕적·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보편적 인식이다. 프리켈·무어(2013), 347.

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https://www.pacst.go.kr>)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2014.9.11).

적으로 획득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정치연구는 또한 과학과 과학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정은 과학사회 내외에서 과학적·과학 외적 패권을 행사하는 핵심세력<sup>13)</sup>에 의해 제어된다. 과학사회 내부에서는 핵심세력이 제시하는 유리스틱의 수용을 명시적·암시적으로 강요하는 과학행위의 절차적 통제가 진행되며, 외부에서는 연구지원기관, 특히 연구자원 배분기관이 견지하고 있는 이해관계에 상응하는 지식의 생산을 유도하는 정치적 압력이 행사된다. 개별 과학자는 이러한 과학적이지자 탈과학적인 제어구조 속에서 생산될 지식의 내역과 지식생산방식을 선택한다. 즉, 과학적이지자 과학 외적인 이득이 보장되지 않거나 과학사회 내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상응하지 않는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이 의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 사회는 소위 ‘주류 집단’과 ‘비주류 집단’으로 분리되고, 연구자원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집단은 과학사회에서 소외된다(김웅진 2009, 33, 58).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학자는 ‘새로운 지식’, ‘일탈적 지식’의 생산을 통한 과학적 진보에 요구되는 과학적 창의성을 상실하기 쉽다.

이에 더해, 지식이 사회적 부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능력(state capacity)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되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society)가 도래한 현 시점(Drucker 1993, 20)에서 과학정치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니라 군사적·경제적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전략적 자산이며, 보다 포괄적으로는 사회안정의 기본적인 요건들, 즉, 안보, 보건, 고용, 삶의 질, 문화발전의 핵심요소(Kitcher 2001, 138)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학자 사회의 정치적 분과성과 과학행위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편파적인 지식생산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2006년 1월 12일 황우석 연구팀이 과학전문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한 논문 두 편의 연구결과 조작이 공식화되기 전까지 중앙정부 관련 부처들과 경기도청은 황우석이 주도하는 연구 프로젝트와 연구시설 구축에 총 658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차년도(2006년) 연구를 위해 20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고, 2006년부터 4년

13) 앞의 각주 2) 참조.

간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으로 매년 3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었다(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5).<sup>14)</sup> 이와 같은 전폭적인 정부지원은 국가연구개발비를 배분·관리하는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과 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던 황우석 교수의 정치적 수완과 소위 ‘황금박쥐’<sup>15)</sup>라 불리던 황우석 지원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강양구 외 2006, 43, 132).

## V. 결론: 논의의 제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학정치연구는 그 학문적·실천적 적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학계 내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거나 도외시되어 온 영역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과학적 지식의 본질과 생산경로, 과학기술의 정치사회적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식사회학(과학사회학)과 과학기술학 분야<sup>16)</sup>에서 진

14) 황우석 교수 관련 정부예산 지원현황 및 계획 (단위: 억 원)

구분	1998-2005년	2006년(안)	비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380	65	복제소, 광우병 소, 이종장기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병원	63	40	세계줄기세포허브 건립
외교통상부	-	100	첨단치료인력개발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KOICA 이전비용
경기도	215	-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 건축
계	658	205	

\* 출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황우석 교수 관련 정부예산 지원현황, 문제점 및 민주노동당 입장.” 2005년 12월 19일 발표.

- 15) 당시 서울대 교수 황우석,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보좌관 박기영,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름의 앞 글자를 연결한 용어이다. 이들은 황우석 연구팀에게 강력한 과학적·과학 외적 패권을 부여하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강양구 외(2006).
- 16) 지식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은 실재(reality)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탐구하고, 과학사회학(Sociology of Science)은 연구비 지원, 보상과 자원의 분배, 학술지 심사, 인용패턴, 연구원 채용, 일반적인 과학자의 규범과 가치시스템 등에 관해 연구하며,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은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맥



행되어 왔으나, 정치학의 경우 주요 연구문제의 목록에 애당초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성격을 필연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정은 정치학의 고유한 시각을 통해 풀 수 있는 수많은 연구문제들을 담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탐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논의의 맥락을 제기함으로써 과학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려 한다.

- ① 지식생산과정에 과연 정치권력이 개입하는가? 과학적 지식은 합리적이자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개입될 여지가 전무하거나 개입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영향력이 미미하여 무시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과학행위와 그 결과물인 과학적 지식에 내재된 정치사회적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 ② 만약 지식생산경로에 정치권력이 개입한다면, 그러한 권력의 기반이 되는 자원의 유형과 획득방식은 무엇이며, 자원배분을 주도하는 과학패권은 과학사회 내외의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가? 과학행위의 정향과 성격을 좌우하는 권력의 기반과 작동양상이 여타 영역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동일하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과학정치를 별도의 연구영역으로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 ③ 과학기술활동에 다양한 사회세력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이해관계자 집단(stakeholder)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대 한국정치사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47) 내에서 지식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의 성격과 그들이 획득하려는 실익은 무엇인가? 지식의 생산과 적용과정에서 각 행위자가 내리는 합리적 선택이 과학사회 내외의 정치질서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④ 과학사회 내외에 유·무형의 제도나 행태로서 구축되는 정치질서는 전통적인 정치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정치질서와 어떠한 맥락에서 일치하거나

---

락에서 과학과 기술의 형성·발전·결과에 관해 연구한다. 버거(2013), 14; Bloor(2004), 920; Hackett(2008).

차이를 보이는가?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형성된 정치질서가 기존의 정치질서와 어떠한 양상으로 결합 혹은 유리되는가?

이와 같은 네 가지 맥락에서 상정될 수 있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정치학 연구의 지평을 오늘날 정치사회의 핵심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과학적 지식생산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양구, 김병수, 한재각. 2006. 『침묵과 열광』. 서울: 후마니타스.
- 과실연. 2008. "<성명서 21호> 과학기술은 선진화의 기본요건." 2008년 2월 25일자. 과실연 홈페이지 <http://www.feelsci.org/2008/02/>. (검색일: 2014.9.9).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01. "<정책연구보고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과학기술부.
- 김상태. 1995.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이론적 분석 틀." 『한국정치학회보』 29집 1호. 53-72.
- 김영명. 2006. 『우리 정치학 어떻게 하나?』. 서울: 오름.
- \_\_\_\_\_. 2010. 『답론에서 실천으로』.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웅진. 2009. 『과학 패권과 과학민주주의』.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황우석 교수 관련 정부예산 지원현황, 문제점 및 민주노동당 입장." 2005년 12월 19일 발표자료.
- 부르디외, 피에르. 2002. 『과학의 사회적 사용』. 서울: 창작과비평사.
- 배영자. 2005. "생명공학기술과 국제규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53-73.
- 이영희. 2011.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지성사.
- 프리켈, 스콧, 켈리 무어, 김동광 외 역. 2014. 『새로운 과학의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서울: 갈무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08. "연구하는 과학자, 정치하는 과학자가 따로 있다?" 『과학과 기술』 41집 3호. 62-63.
- \_\_\_\_\_. 2012. "<특별좌담회> '선택 2012: 과학기술과 정치' 과학이 국정정의 중심에 서도록 과학기술인들이 결집해야." 『과학과 기술』 513집. 44-51.
- 홍성민. 1999. "국제정치문화연구 방법론 서설." 『국제정치논총』 38집 3호. 25-42.
- 홍성민 외. 2008. 『지식과 국제정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 Barber, Bernard. 1961. "Resistance by Scientists to Scientific Discovery." *Science* 134. 596-602.
- Bloor, David. 2004. *Handbook of Epistemology*. [E-book] Springer Netherlands.
- Brown, Robert. 1988. "The Experimenters' Social Circl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18. 101-06.
- Collins, Harry. 1992. *Changing Order, Replication and Induction in Scientific Practice*.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hl, Robert. 1982.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Drucker, Peter. 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Business.

- Fuller, Steve. 2000. *The Governance of Science*. Buckingham &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Hackett, Edward, et. al. eds. 2008. *The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3<sup>rd</sup> ed. Cambridge: MIT Press.
- Jasanoff, Shelia, ed. 2006. *States of Knowled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King, Gary, Keohane, Robert,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tcher, Philip. 2001. *Science, Truth,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katos, Imre. 1986.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uden, Larry. 1978. *Progress and Its Problems: Towards a Theory of Scientific Growth*. Oakland &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81. "A Problem-Solving Approach to Scientific Progress." Ian Hacking, ed., *Scientific Revol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44-55.
- Margolis, Howard. 1993. *Paradigms and Barriers: How Habits of Mind Govern Scientific Beliefs*.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use, Joseph. 1987. *Knowledge and Power*.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인터넷 사이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https://www.pacst.go.kr> (검색일: 2014.9.11).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http://www.dibrary.net/kolis/> (검색일: 2014.8.2).
- 과실연. <http://www.feelsci.org/2008/02/> (검색일: 2014.9.9).
- 인터넷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index.laf> (검색일: 2014.8.2).
- 인터넷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kor\\_index.yp](http://www.ypbooks.co.kr/kor_index.yp) (검색일: 2014.8.2).
-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http://www.dbpia.co.kr/Journal/IssueList/1067> (검색일: 2014.7.3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검색일: 2014.9.9).
-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검색일: 2014.9.9).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kciportal/> (검색일: 2014.8.10).
-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http://www.dbpia.co.kr/Publication/828> (검색일: 2014.7.30).

【ABSTRACT】

## Politics of Science - New Agenda for Political Science: A Bibliographic Review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Lee, Seo Young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 Ungjin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 bibliographic review of the articles published both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an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the related books and monographs published in the period of 1959-2014, reveals that the studies on politics of science investigating the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both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hegemony in the process of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have compiled minimal, if not totally negligible, degree of systemic accumulation. This remarkable paucity of the studies on politics of science is the result of scientists' "habits of mind" which induces conformity to the heuristic of the "strong science", and rational choice to maximize tangible and intangible self-interests in the course scientific activities.

Considering the ongoing process of sociopolitical cleavages leading to the rapid politicization of previously non-political actors including scientists in Korea, and the necessity for balanced and hegemony-fre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levance of the studies on politics of science becomes all the more conspicuou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suggests a number of the research agenda on politics of science: the sociopolitical nature of scientific activities and knowledges; the scientific as well as non-scientific political power and hegemony controlling knowledge-production; the actors and the interaction patterns and structure of politics of science.

---

**Key Words** | Korean political science, heuristic, politics of science, research tradition, scientific knowledge